강운태·박지원·이용섭 국감서 '이름값'

지방재정·4대강 사업 등 이슈 이끌어 내
국정경험 토대 업무철저 파악·대안제시

23일 막을 내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수 야당 등의 한계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다선 의원들의 활약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운태 의원

박지원 의원

이용섭 의원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의 강운태 의원(광주 남)과 국토해양위의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지원 의원(목포시) 등의 활동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크게 돋보였다.

우선 내무부 장관 출신의 강운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부의 3조3천억원의 불법 공사 발주를 폭로한 것은 물론 턴키 입찰로 4대강 공사 낙찰율이 92%에 이르고 있다며 대기업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정까지 이끌어 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88.3%나 돌아간다며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점을 증명했다. 경제위기 극복 등과 관련, 긴급 유동성 자금이 이미 60% 정도 회수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단기 출구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 한국은행 총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 정부의 안은 광주·전남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등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의 3단계 가중치를 5단계로 확대,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토해양위의 이용섭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이 의원은 건교부장관, 행자부장관 등을 지내며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정부가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에 KTX-Ⅱ 차량을 투입하면서 대폭적인 운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 주택의 장판과 벽지 교환 등의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다고 지적, '민생 국감'의 모델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의 국정감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박지원 의원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문제와 관련, 대검의 첩보보고서를 입수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정보통으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발휘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출금 금지 영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악수하는 정몽준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에서 국회의원 재선거 수원 장안 박찬숙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한나라당 정몽준〈왼쪽〉 대표와 이찬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인 4대보험 혜택 받게"

서갑원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2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 문화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부분의 직업문화예술인은 법적 무직자 신분으로 인해 국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임금채권 보장, 금융기관 이용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 대상자는 순수 창작예술가를 기준으로 최소 약 7만명에서 방송 및 연예, 기술 스텝 등 직업 문화예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32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국현 의원직 상실 창조한국당 존폐 위기

대법, 선거법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재오·손학규·김근태 거론

■ '은평을' 누가 나설까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의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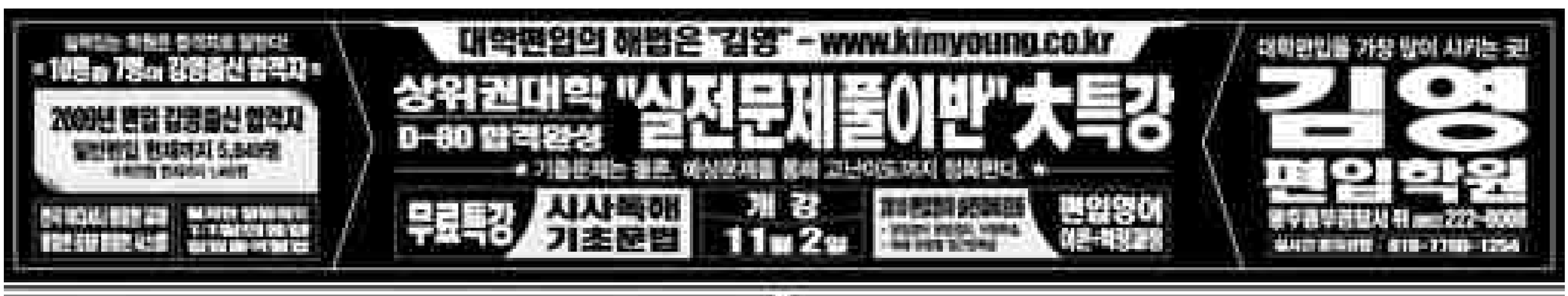
내년 7월에야 재선거가 치러져 아직 9개월여가 남았지만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문 대표 간 '빅 매치'가 이뤄진 곳이어서 재선거 후보를 둘러싼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하며 한나라당을 탈당, 은평을 당협위원장을 그만뒀지만 이 지역구에서 15대부터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대타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상임고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손 전 대표의 경우 이번 10·28 재선거 출마를 포기했지만 내년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출마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여권의 실세인 이 위원장이 나올 경우 손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더더욱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김 고문도 개혁진영의 상징성을 내세워 이 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된다. 이에 김 고문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10월 재보선에 은평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을 때 김 상임고문은 '당이 요청하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 이 위원장을 보내지 않고 정치신인을 내세울 경우 민주당에서는 고연호 은평을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수도 있다.

진보신당의 간판급 인사인 심상정 전 대표의 출마설도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같이 나오고 있어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